

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검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 혼란의 학교



내용

좌장 : 성열관교수(경희대학교)

· 발제1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대입 개편안의 문제점

박시영 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발제2 |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대입제도 방향

최재훈 교사 (좋은교사운동)

· 토론1 | 김경훈 학생 (마산 가포고등학교)

· 토론2 | 민일홍 교장 (춘천 전인고등학교)

· 토론3 | 김경숙 교수 (건국대학교)

· 토론4 | 이재원 책임입학 사정관 (동국대학교)

· 토론5 | 김명규 장학관 (서울시교육청)

· 토론6 | 김한승 과장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체 토론

일시

12월 6일 (수) 15:00~17:00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층)

주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
민주연구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개 회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과 이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개최에 큰 힘이 되어주신 민주연구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좌장을 수락해주신 성열관 교수님(경희대), 발제를 맡으실 박시영 교사님(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최재훈 교사님(좋은교사운동)과 토론을 이어나갈 김경훈 학생(마산 가포고), 민일홍 교장 선생님(춘천 전인고), 김경숙 교수님(건국대), 이재원 책임입학사정관님(동국대), 김명규 장학관님(서울시교육청), 김한승 과장님(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부터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집중되면서,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계인 고교학점제가 점진 도입돼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착과 더불어 학생 각자의 소질과 진로에 따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역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둔 현시점에서 우리 교육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학교가 단순히 소수 학업경쟁의 승리자를 배출하는 장소가 아닌, 교육 담론의 확장과 다원주의적 통합이 전제된 학습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합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 개최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학계 교수, 교사, 학생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및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도록, 현장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제시된 고견들을 수렴해 우리 교육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서울 관악구을)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정태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박시영 선생님, 좋은교사운동 최재훈 선생님, 경남 마산 가포고등학교 김경훈 학생, 춘천 전인고등학교 민일홍 교장선생님, 건국대학교 김경숙 교수님, 동국대학교 이재원 입학사정관님, 서울시교육청 김명규 장학관님, 교육부 학교 교수학습혁신과 김한승 과장님 감사합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성열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2달간 의견 수렴 후 12월 말에는 확정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이고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생과 학부모까지 나서서 교육부 시안이 확정되면 애초 대입제도 개편의 취지인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되고, 입시경쟁이 심화되며 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설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안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준비되어 온 고교학점제를 도외시키고 지나치게 현상 유지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편까지 해놓고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사회적 합의도 무시한 채, 입시제도와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안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서 현장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더 의미 있는 배움을 이어가길 기대하며 수많은 걸림돌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안은 2025 교육과정 개정을 포함한 고교학점제와 양립할 수 없는 구조로 현장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의 노력을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의 대입 개편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의 방향은 어떤 흐름이어야 하는지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개편안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방안’이라고 했지만 정작 ‘미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을 여행에 비유해 본다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경로로 자유 여행을 떠나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입 개편안은 단체여행을 강요하는 격입니다. 이런 교육에는 창의와 다양성이라는 미래가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교육부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조정 방안을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문정복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대입 개편안의 문제점

고교학점제의 시행과 고등학교의 현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21.8. 교육부)에 따르면 먼저 마이스터고(2020), 특성화고(2022)에서 적용하고 일반고(2022~2024) 순으로 준비하여, 2025년에는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즉,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학점의 이수·미이수를 근간으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미 5년여에 달하는 준비 기간 동안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수는 2018년 82개교에서 시작해 2023년 1,692개교(100%)로 늘어났다.¹⁾

미이수가 적용되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교육부, 2021)’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에도 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있었지만, 실제 선택권은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 제2외국어 교과 중 일부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학교에서 짜준 과목 조합에 따라 두, 세 가지에서 택1을 하는 정도였다.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낸다든지 실제적인 선택권을 발휘가 어려웠고 학교에서도 대학 입시에 매몰되어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기보다는 수능에 유리한 과목 조합을 만들어 내기에 바빴다.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 주도성을 중시하는 교육계의 흐름에 따라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주도성을 강조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다.²⁾

고교학점제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선택권을 열어주어 봐야 내신 유불리나 수능 과목에 맞춰 선택할 텐데 그 취지대로 운영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교사나 학부모 대부분 ‘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하며 뒷말을 삼켰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모든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학생의 최저 학력에 대한 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연구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근 6년간 지속되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교의 노력과 기대감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평가제도가 바뀌거나 대입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과목 개설을 위해 더 많은 교·

1)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 7쪽(2023, 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

2) 교육디자인네트워크] ② 교사를 줄이면서 고교학점제를 하라고?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박시영(경기 신장중 교사)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

강사가 지원되거나 학점제를 운영할 교실이라든지 이동수업을 위한 홈페이지 등의 여건이 마련된 것도 아니었다. 현실은 여전히 척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선도학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할 때부터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였다.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수업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대안형 과목을 개설하고, 최상위권 학생이 실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특목고형 전문교과를 개설하기도 했다. 학생의 선택권을 우선시하다 보니 시간표 만들기가 어려워 수작업으로 겨울방학을 모조리 투자해 학생 시간표를 짜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 교사가 3과목의 이상을 지도하거나,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아 교과 수업 시수가 부족하여 전공이 아닌 교양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맡아서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다. 교실이 부족해 시청각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교육 환경은 열악했지만,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을 위한 길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 가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사실 그 동력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고교학점제 도입 초기부터 연구·선도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 지려면 내신 산출이 석차 등급 없는 성취평가제로만 실시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왔다. 내신 유불리에 따라 왜곡된 선택을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절대평가로 인해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부활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진학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고교체제 개편도 같이 논의되었다. 실제 2021년 2월 17일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에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교육부에서 2023년 6월 21일에 발표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선택 과목을 석차 등급 산출 없이 성취평가제 5단계로만 평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공통과목의 석차 등급 산출이나 수능 개편에 대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어도 적어도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어 현장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란 기대는 있었다. 그런 와중에 모두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2028 대학입학제도 개편 시안>이 2023년 10월 10일에 발표되었다.

2028년 대입개편안(2023.10.10.)의 문제점

1.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상대평가 실시

고교학점제의 정의에 따르면 학생의 과목 선택은 진로와 적성에 기반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평가가 도입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박시영

(신장중 교사)

학생들은 내신 유불리(수강 학생 수가 많은 과목)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학생 선택에 의미가 없어진다. 현재는 일반선택 과목은 9등급 석차 산출,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모든 과목(예술, 체육, 교양 제외)에서 석차를 산출하게 되어 있다. 석차가 9등급이 5등급이 된다고 해서 학생의 부담이 주는 것이 아니다. 석차 산출을 하는 과목의 수가 중요한데, 오히려 모든 과목을 상대평가로 하여 학생 부담을 가중했다. 게다가 그동안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 학업 설계에 많은 공을 기울였던 학교의 노력을 무산 시키는 안이기도 하다. 결국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2. 수능 출제 과목의 선택권 침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출제 과목이 발표되었다. 유불리 논란을 일으켰던 선택 과목을 없애고 공통 영역에서만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공통 영역에 일반 선택 과목이 포함된 데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 지정 과목을 줄이고 학생들이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을 열고 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이수 학점을 공통 과목 이수만으로도 채울 수 있게 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에서 특정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이 공통 출제 과목이 되면서 학생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 되고 말았다. 결국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은 의미가 없어졌다.

3.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유명무실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고교학점제의 중심축 중 하나이다. 이는 학교와 학생의 수업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여 기본 학력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성취 평가제를 기반으로 한다. 성취평가제를 제대로 해야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내신 석차 등급이 생기면 제대로 된 성취평가제 운영은 어렵다. 고등학교 내신은 다시 변별을 위한 출제와 학생들의 등급 나누기 위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판별하고 지도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거란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4. 고시되자마자 누더기가 될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개정된 것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개정한 교육과정이다. 학생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 이수 학점을 줄이고 학생 선택 학점을 늘렸으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진로 학업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되자마자 다시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고교체제 개편 계획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대입 개편안의 문제점

외고, 국제고를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과목이 없다. 고입 입시 경쟁 완화와 성취평가제의 내실화를 위해 외고와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들 학교를 위한 과목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고시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은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안에 따라 성취평가제로만 평가될 것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는 과목들이다. 그런 과목들이 모두 석차 등급을 산출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과목이 지필평가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과목 성격에 맞게 프로젝트나 학생 활동 기반으로 이루어지기보단 지필평가 시험을 대비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논술형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또 성취평가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서·논술형 비중만 강제로 높여 현장에만 모든 부담을 떠맡기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가며

이번 대입 개편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았는가이다. 단위 학교의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힘들긴 하지만 이를 통해 비인간적인 경쟁 중심 평가와 교육을 바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거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평가제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 오랜 준비 기간 동안 청사진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는 그동안 발표해 왔던 모든 안을 백지화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았는지, 얼마나 숙고하고 오랫동안 논의한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더 이상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6년을 노력해서 준비했던 교육 시스템을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학생과 교사, 학교, 교육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대입 개편안을 새로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대입 제도 방향

2015 교육과정 운영

2015 교육과정이 등장했던 즈음 지역별 설명회 자리에서 모 대학 입학처 교수님이 상대평가가 사라지면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볼멘소리를 한 적이 있다.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겨우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진 정량적 자료뿐이었던 말인가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그런데 당시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획일적이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학생의 다양한 역량이나 창의성, 주도성, 성실성, 공동체성 등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과목 편성의 다양함이 없었고 교과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내용도 천편일률적이었다.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은 학생을 드러내기보다는 고등학교가 이런저런 행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한 학교가 많았다. 대학에서 선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이해됐다.

고교학점제 전 단계인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선택과목까지는 상대평가, 진로선택과목부터는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도입했다. 전 과목을 성취평가(절대평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수궁이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었다. ‘오랫동안 입시에 찌든, 입시가 뭐라고, 대학 입시 때문에 사회가 힘들고’ 등등의 표현을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는 형태가 구성될 수 있었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1단계에서 9단계까지 동일한 기회를 주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가능해졌다. 1학년은 보편성 기반, 2학년은 다양성 기반, 3학년은 개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과목 편성이 가능해져 공부를 더 해야 하는 학생과 공부보다는 다른 것을 하고 싶은 학생, 의미 없는 과목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에 수학1, 수학2, 2학기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리고 선택으로 기하까지 5과목의 수학을 모든 학생이 이수한 다음 3학년 때 수능을 위해 복습을 해야 했던 교육과정에서 2학년 1학기에 수학1, 2학기에 수학2, 1, 2학기 선택으로 기하 - 선택하지 않아도 됨 - 3학년 1학기에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중 택1 등으로 분산 배치하고, 수학 과제 탐구, 인공지능 수학, 기본 수학, 경제 수학 등 자기의 수학 수준과 진로에 따라 또 다른 수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당연히 2015 교육과정만의 덕택은 아니다. 그간 꾸준히 진행되었던 교육정책인 성취평가제, 수행평가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선택과목이 무엇인지, 이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역량은 무엇인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서는 어떻게 학생의 역량이 확장되는지를 확인하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고등학교와 공유하여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고 대학에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일종의 선순환이 가능해졌다.

고교학점제와 책임교육

고교학점제는 이런 장점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그 중 고교학점제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책임교육이다. 고교학점제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 등교만 하면 별 문제없이 졸업할 수 있고 이는 학생에게도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개인으로는 좌절과 아쉬움이,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한다. 한 사람을 잘 키우겠다는 교육의 목표를 개인도 사회도 도달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책임교육은 누구라도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면 사회에 나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에 맞춰 편성되어야 하는 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가 고교학점제이고 따라서 상대적 변별이 아니라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3년 동안 과목별로 진행하도록 설계 되었다.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점검하는 방법인 평가는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에서 다양한 수행평가로 전환되고 있다. 수행평가 비율을 높여 다양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거나 비율을 높이기 어렵다면 40%의 수행평가를 여러 형태로 구성하여 학생에 따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이 최근 3~4년간 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 선택 과목은 100% 수행평가로 진행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그래서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울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내신 성적 1단계가 아니어도 소외당하지 않는 교육과정과 평가, 8단계도 자신의 진로를 찾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평가를 만들어 보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는 수준에서 2015 교육과정에 비해 선택과목을 간소화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줄였다. 일반선택 사회탐구를 4과목으로 줄이고, 무한한 진로 선택과목 대신 일반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위계를 형성하여 깊이 있는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고교학점제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잘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이수학점을 줄여서 학습의 여백과 학교마다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2015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 고등학교, 지역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서는 보다 더 학생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두고 한 학생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만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았다. 형식적일 망정 과목 개설의 여지를 크게 두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 선택의 폭을 늘리는 노력을 해왔고 이에 맞는 대학 입시가 개발되겠다는 희망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그래서 2028 대입 시안 이전의 안 그러니까 현행 안에 대해서 불만은 있으나 수능 체제가 개편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2028 대입 현행 안과 시안

현행안은 1학년은 9단계 상대평가, 2, 3학년은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한다. 1학년을 상대평가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여러 번 지적 했었다. 3개 학년 과목 선행보다 간편해진 1개 학년 선행이 가능하게 되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1학년 자퇴생은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고 대입 전형에서 1학년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할 경우 2, 3학년 교육과정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통로를 통해 언급하고 개선안을 요구했다. 더불어 수능은 절대평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교육과정 운영과 맞지 않으니 수능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빠뜨리지 않았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고등학교 과목 선택에서의 왜곡, 수능에서의 과목 선택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9단계 상대평가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모집단의 수와 상위권 학생의 선택 여부에 따라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학에 따라 지정 과목이 있지만 권장으로 되어 있거나 지정하지 않은 대학이 대부분이어서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9단계 상대평가의 한계 안에 갇혔다는 표현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8 대입 시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고등학교, 모든 교과와 모든 과목에 대해 5단계 상대평가를,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 없이 그러니까 표준점수 제공하지 않는 9단계 상대평가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고등학교가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완전히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점수 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런 빈약한 근거는 시안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 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진행할 경우 일반고는 이들 학교에 비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교육부가 이를 모르지 않을 테니 일반고의 불리함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전 과목 상대평가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 산출을 상대평가 9단계에서 5단계로 완화하고, 2,3학년 내신 역시 5단계 상대평가를 병기하되 표준편차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상황에서의 교육지책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일반고의 성장 기회도 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과목 상대평가 병기일 경우 1등급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서 불리해 지므로 소규모 학교 기피현상이 일어나 지방 소멸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대입 제도 방향

자사고, 외고 입학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습 성취도가 높은 편인데 이 학생에게 적절한 과목 편성을 시도하는 학교와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고려하는 학생이 부딪힐 수 있다. 일반고역시 5명만 되면 내신 등급이 산출되므로 어려운 과목이나 성적 상위권이 이수해야 할 과목일수록 개설이 어렵거나 선택이 어렵게 된다. 성적 하위권 역시 적은 내신 성적 부담으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했던 기회가 사라지게 되어 개인의 적성과 진로는 물론, 학습 능력에 따른 과목 선택마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에게도 손해이지만 사회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모두가 같은 영역의 같은 과목으로 진행하는 취지에는 적극 찬성이지만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진행하면서 국어와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것, 더구나 국어, 수학, 영어는 일반선택과목인데 탐구는 1학년 공통 과정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을 제안했다. 2022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비추어 볼 때 탐구 영역은 어떻게 출제할 것인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잔뜩 갖도록 만들어 놓았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대학은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 되었다고 판단하고, 교과 전형과 정시 수능 전형 반영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학생에 대한 정보제공이 대부분 사라진 학생부를 받아 보기 때문에 과목 선택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고등학교는 과목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제대로 된 대학 입시가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고등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학생 정보는 매우 적어졌는데 대학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공정한 대학 입시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 제안

우리가 논의하는 대입은 주로 10%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9단계 상대평가의 경우 1,2단계이내 11%정도, 5단계 상대평가의 경우 10% 학생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최소 내신성적 하위 40% 학생의 대입은 수능과 관련이 없다.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아니다. 대학 합격률은 100%에 가깝지만, 진학률은 대략 70% 선이고 최근엔 이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학교와 관계없는 학생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상대평가 체제라는 것은 고등학교 교사들은 다 알고 있고 40%의 학생이 수능 응시를 하지 않는다면 단계 체제가 무너지리라는 것도 잘 알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대입 제도 방향

있다. 현재는 어른들의 주술에 엮인 것처럼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하지만, 행여 수능 응시가 무의미하다는 여론이 확산 되면 상대평가 단계 체제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상대평가는 동일 집단 내에서의 변별에는 효과적이지만 이질집단에서의 변별은 쉽지 않다. 적절한 성취 기준에는 도달했는지, 역량은 충분히 키워졌는지는 확인하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경계를 짓기에 유용한 도구이지 절대적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완전하지 않다. 그럼 에도 상대평가를 추구하는 것은 인구가 100만인 시절 80만은 버리고 20만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하던 추억을 45만 인구의 시대에 재현하고 싶은 욕망의 표현인 듯하다.

고교학점제에 맞는 내신과 수능, 그리고 대입은 전 학년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 그리고 대학별 선발이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과 학교 현장, 그리고 대학의 여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실제는 알기 어렵다. 아마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래서 내가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불안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렇다면 점진적인 변화라도 이끌어 내야 한다.

내신에서 전 학년 성취평가(절대평가)로 운영되는 것이 고교학점제에 부합하지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 할 경우 시안의 5단계 상대평가 병기, 표준점수 미제공을 전제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까지는 상대평가 병기, 진로 선택과목과 융합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절대평가)로 운영하는 방안이 점진적인 접근에서 가장 타협점이 높다. 이 경우 자사고와 외고의 입시에 대한 영향이 현재와 같아 자사고 외고 쏠림 현상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일반고 학생에게 자신의 적성과 진로 그러니까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에 맞는 과목 개설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고 성취 기준에 맞는 수업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수준의 교육목표에 도달하기가 용이하다. 학생 입장에서는 성적에 대한 부담 대신 자신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얻게 된다. 1학년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의 5단계 상대평가 병기로 현재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변별을 이끌어 낼 수 있어 대학의 선발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수능은 표준점수를 제공하지 않는 의도에 맞춰 1학년 공통과목 자격고사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학에 가기 위한 최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니 기초, 기본학력 안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복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현재의 수능이 역량과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는 어렵다는 여러 학자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도 있다. 그러나 자격고사, 성취평가(절대평가)로 대학에서 학생 선발하는 과정이 준비되지 않았고 긍정적인 국민적 여론이 적다면 시안에서 제시하는 형태의 수능을 진행하되 탐구 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1학년 탐구 과목은 각론에서 제시한 대로 융합적 사고를 위해 개발되었는데 이를 9단계 상대 평가로 실시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사교육 확대, 고등학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2, 3학년 교과목 편성에서 과목명과 다르게 필수로 수능 대비로 운영하는 과목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서 학생, 보호자, 교사의 교육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심화 수학의 수능 과목 포함은 교육부가 제시한 시안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기본학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발표한 시안에서 선택형으로 심화 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시안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수능 과목으로 개설 될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왜곡이 또 일어난다. 국수영 81학점 중 절반이 넘는 45학점 정도가 수학에 배당될 경우도 충분히 예상된다. 수학이 학문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학생이 심화과정의 수학을 이수할 필요는 없고 더구나 국어나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와 특기가 더 많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을 받을수도 있어서 선택 이수과목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수시와 정시의 분리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불러오고 있다. 3학년 1학기에 마무리 되는 수시전형 으로 재학생의 3학년 2학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반면 재수생은 반복학습의 유리함을 등에 업고 정시에 응시하게 되어 N수생의 급증을 불러 온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 할 경우 수시와 정시 선택의 기회가 늘어나 재수생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선발 역량을 고려하여 수능과 수시 일정을 조절하여 통합할 필요성이 크다.

대학입시는 선발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 한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교육을 기반으로 한다. 대학 입시에 과 몰입되어 국민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고려를 등한시 할 경우 우리 사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고교 학점제는 책임교육을 근간으로 한사람의 삶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한 대학 입시는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보편성, 다양성, 개별성을 기반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산출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2028시안은 이런 성격에 부합하기 어렵다.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가치인 국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돕는 안으로 변경 되어야 한다.

수능 끝난 '킹반고3'의 2028 대입개편안 리뷰 :

총평 : '변혁다운 변혁'을 겁내지 말아줬으면

- 킬러문항, 사교육 카르텔, 방식 변경 위주의 대입개편안 등 주로 국소적인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가시적인 변화와 나름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문제를 일정 부분 잘 진단한 것과 단도나마 빼들겠다는 그 취지 자체에는 지지와 응원을 보냄.

- 그러나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이러한 기조가 교육적으로 적절한지는 의문이 듦.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변별'을 대입정책의 1순위 고려 사항으로 설정한 것은 교육의 수단이 교육목적을 잡아먹은 지금의 상황을 더욱 연장할 뿐임.

- 대체 누가 원하는 변별인가? 맹목적, 기계적 변별논리의 추동은 누가 하며, 왜 하며, 그 결과는 지금 어떠한가? ...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원적, 본질적 문제에 애써 접근하지 않고 작금의 교육문제를 더욱 지속케 한 데 대해선 큰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음.

고교내신 : 누구를 위한 5등급제이며, 어떻게 나눈 것인가?

- 개편안에 제시된 내신 등급 구간 (10%-24%-32%-24%-10%) 은 교육적 고려에 의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설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등급의 일부분을 묶고 떼며 기계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음.

- 기존 9등급제 하에서의 4~6등급 중간층 54% → 개편안에서 32%로 대폭 축소되고 최상위, 최하위 등급만 대폭 증가. 누구를 위한 5등급제이며, 급간 변경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이들'은 누구인가?

- 그냥 '평균 1등급'이 아니라 '1.00'을 위한 체제의 공고화는 등급 사수를 위한 학생 간 전반적 경쟁의식 강화는 물론이고, 기존에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져 '부(副)교과전형', '특목자사용 전형'이라는 비판을 듣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숨통을 아예 끊게 될 것임.

- 또 '미끄러지는 아이들'에 대한 구제절차와 '올라갈 힘을 잃은 아이들'에 대한 희망의 부재는 결국 황폐화된 학교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돌아보며 교육 그리고 교육과정의 '본위'를 생각하다

김 경 훈 (경남 마산가포고 3학년, 前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

현장과 말라비틀어지는 우리의 상황을 방치 내지 악화시키게 될 것임.

대수능 : 지금 수준의 수능중심체제 유지와 통합과목 필수화는 공존할 수 없다.

- 교육, 정치관료들이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수능 위주 입시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는커녕 이를 더욱 강화하며 방식 변경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수능 자체가 갖고 있는 공정성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움.

- 통합과목의 필수 응시 자체는 인간성 완성이라는 고등학교 교육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데. 그러나 기존의 변별논리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로 과목만 줄인다면 지금까지 과목 선택 편중 문제의 이면에서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다른 모든 문제들이 튀어나올 것임. 특히 교육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킬러문항 문제와 사교육 카르텔 구조 등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함.

- 애초에 교육과정 과중화를 막는 동시에, 킬러문항을 빼는 동시에, 그 와중에 변별성을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을 때 '고등학교 3년 학교생활에 집중하면 잘 풀릴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결국 4% 변별을 위한 잡기술 활용 문제만 더 나올 뿐... '킬러문항 없어졌다'고 그리 기를 쓰던 윗분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던 어른들과 현역-n수가림없이 속에서 열불 터지던 청소년들로 분위기가 확 갈린 이번 수능을 보면 다음의 상황이 대강 예상됨.

- 기존에 이뤄지던 고교 3년 과정의 선행학습은 1년 과정 압축 선행학습으로 변할 것이고, 이 압축과정을 끊임없이 소화, 재생산하기 위해 공-사교육을 막론하고 모든 중등 교육과정이 고1 과정에 집중될 것임. 중학교의 국-영-수-사-과 간 균형을 맞추어 줄 수는 있겠으나, 고등학교 2~3학년의 모든 과목이 주변적으로 취급될 것임. → 고1~2 선택과목은 '전략적 무시', 고3 선택과목은 대놓고 '거부'하는 지금의 기초 심화 + 수능 문제풀이용 잡기술 연마 및 교과서의 변경에 있는 지엽적 내용 암기에 집중

수능 끝난 '킹반고3'의 2028 대입개편안 리뷰 :

교육과정 : 도구과목의 입시 중요도 상승과 상대평가의 전면화 속에서 협력학습은 가능한가?

- 수능의 기계적 변별관이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문항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 문제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로 '여전히 변별이 중요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필수화해도 대학은 충분히 변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각 대학이 국어와 수학 성적으로 입학생을 거르려는 기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함. 그럼 잘 거르기 위해 '기술'을 쓴 문제가 나오게 되고, '찍기 로또'의 영향력은 더 심해지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더 이상하고 애매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반복, 반복...

- 더하여 EBS의 중요도 상승은 마냥 좋게만 인식할 부분이 아님. 내신 평가에서 논서술형이 아무리 이뤄져도 수능에서 정형화된 문제만이 출제되는 이상 평가를 본위로 되돌려놓는 것은 어려움. 지금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는 이미 부차적인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주 도구는 개념 중심 족집게 교재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임. 즉 현 상황은 지식 기반의 구시대적 학습을 더욱 심화하며 교육목적의 실현을 더욱 강하게 막고 있음.

- 상대적으로 교과 내용이 적고 학생의 주도성이 그나마 보장되는 진로선택교과와 전문교과도 석차를 산출하고 등급을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어떻게 '적정 비율'을 유지할 것인가?

- 이러한 문제의 산재 속에서, 특히 학교생활의 주요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홀로 잘 살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과연 협력학습은 가능한가?

잡설 : 개편안의 '내용'이 온 나라를 달구는 동안, 다른 것들은...

[□ 2028 대입개편 시안 논의·확정

- 대입개편 세부내용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 (11P)] → 국민 중 학생은 어디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돌아보며 교육 그리고 교육과정의 '본위'를 생각하다

김 경 훈 (경남 마산가포고 3학년, 前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

[○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개편안 확정 (11P)]

→ (1) 의견수렴... 결국 국교위는 또 자문만 하며 들러리 서나?

(2) 국가교육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적 전문성을 띤 기구라 할 수 있나?

(3) 당사자인 학생은 어디로?

[○ 교실수업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의 교육개혁('23.2)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내신평가의 혁신 속도는 다소 지연 (1P)]

→ 무엇을 위한 디지털화인가? 지식의 효과적이고 더 빠른 저장을 위해서?

디지털 기반 내신평가 혁신과 5등급제 사이의 연관은?

[공정수능 실현을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넘어 수능 출제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카르텔·부조리를 철저히 근절 추진 (3P)]

결론

- 이제 본위를 고민하고 향해야 할 때다!

준비된 고교학점제, 이에 맞는 대입제도의 개편 필요

대입제도와 고교학점제를 위한 노력

두 분의 발제문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개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는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VIII)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담당 교육연구사로 파견 근무를 하였다.

더불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부분의 연구에 참여하였고, 사회과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해설서 부분의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더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진행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핵심교원 연수'와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관리자 연수'의 분임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 중에 발표한 새로운 대입제도는, 현장의 어려움과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 현장 적용을 위해 그동안 진행해 온 수십 차례 강의와 학교장으로서는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현장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의 머리말을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2004년부터 일명 KEDI 8년 연구라는 이름으로 대입제도 중장기 연구를 시작하여 8년째 연구의 결과로, 당초 이 연구를 출발한 문제의식은 '고교가 대학입시로 왜곡되지않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고교와 대학 양자가 모두 교육 기능을 회복·강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데 있었습니다. ... 중략...

그러나 적어도 대입제도 연구에 8년이라는 긴 시간을 획기적으로 투입하고자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입연구사는 물론 교육정책연구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중략...

KEDI 8년 연구가 수행되는 동안, 대입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 이 연구 초기부터 강조해 온 대입의 '선발 경쟁에서 교육 경쟁으로', '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종합적인 평가로'의 전화 주장은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낳았으며, 고교-대학 연계라고 하는 개념을 현장에 확산시키면서 고교와 대학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 노력, 협력 등의 실천적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의 내신과 대학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의 의미를 높이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요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① 대입제도의 개선만으로 대입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분명한 인식하에,
- ②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 교육의 연계 측면에서 대입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 ③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대입 환경을 정비해야 하고,
- ④ 고교 교육과정, 국가고사, 대학의 입학 전형, 대입 거버넌스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입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중략...

학생 개인별로 진로 탐색과 개발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병행안을 제시하였다. ...중략...

수능 운영 체제는 고교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계하는 관점에서, 수능 I과 수능 II로 이원화하고 절대평가 5등급제 실시를 제안하였다. 수능 I은 공통의 기본교과 중심의 선다형 시험이고, 수능 II는 창의적 인재의 필수적인 요건인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논술형 시험으로 진로 희망에 따른 선택 교과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5등급으로 구분된 평가체계는 학생 선발지표로서의 수능 비중을 낮추고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운영이 시험 체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선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대입제도 개편안 중 이 연구에서 유일하게 차용한 것은 '5등급' 뿐이다.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의 저서 제목이다. 이 책 18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30년간의 학교교육사는 한편으로는 평준화가 학교를 점령하는 역사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이 평준화 학교를 떠나는 역사였다. 다양화만이 학원과 해외에서 떠도는 우리 교육을 다시 학교로 불러오는 대안이다."

240쪽부터 242쪽까지 주요 내용 요약이다.

‘수능. 내신. 논술’이라는 이른바 ‘대입 3중고’를 강요하는 입시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학교별 차이 인정을 통해 내신의 활용도를 높이고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해 대학이 점수 위주가 아니라 다양한 선발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수능시험을 학력고사 형태로 전환하고 ‘과목별 고급심화과정 제도’를 도입해 학교공부만으로 입시준비가 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완전 일임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제시된 대입제도 개편안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책이 집필될 2004년 당시에 학교의 다양화가 필요하였면,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학교의 다양화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선택권의 보장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 기회보장 즉 학생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가능하도록 진행되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대입 제도 개편안은 그동안의 큰 흐름을 거슬러 가고 있다.

대입제도는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

대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환경들이 변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인재상의 변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교육 양극화 현상과 사회적 갈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바라보면 미래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언제까지 선택지에서 정답 하나만을 고를 것인가?, 정답 하나만을 찾는 정답 신봉의 교육을 할 것인가?

대입은 고교-대학의 연계 기능, 대학의 적격자 선발 기능, 공정성에 기반한 사회 통합적 기능을 한다. 대입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이 있다. 고교 교육의 정상화 원칙, 대학의 적격자 선발 원칙, 대입제도 운영의 공공성 원칙이 그것이다.

준비된 고교학점제, 이에 맞는 대입제도의 개편 필요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1.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는 하였는가?
2.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3. 전문가의 의견은 들었는가?
4. 그동안의 교육과정과 대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의 검토는 충분했는가?
5. 위에 제시된 대입의 기능과 대입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은 따르고 있는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입은 학생, 학부모, 고등학교, 대학 등 각각의 주체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하기 힘든 구조이다. 그렇기에 항상 개편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점을 감안하더라도 새 대입제도는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해서 현장 적용이 가능해진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킬 것이고,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 대학의 선발권 제한, 대학교육에서의 중도 이탈자 증가 등이 뻔히 예상된다.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단순한 기술, 약간의 노력을 통해 얻은 능력을 넘어서 다양한 핵심역량을 길러내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을 삶으로 바꾸어 가는 데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더 이상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며, 이에 합당한 대입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바로 나온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지금의 교육 현장은 그때보다 더 큰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

대입전형에서의 '변별'과 '공정성'은 대학의 몫이다.

대입전형은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으로 다각적인 설명회를 하고,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전형의 요소를 고민하고 설계하며 최선을 다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서의 성취평가제는 상대평가의 소모적인 위치 경쟁이 아닌 개별 성장에 초점을 둔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대입과 맞닿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첫째가 변별력이다. 둘째는 공정성이다.

대학입학전형에서 왜 변별을 해야 하는가? 변별의 전제는 경쟁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희소성으로 수요가 공급 보다 많다는 것이다. 고교교육 이후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희소성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장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학은 지원자 중에서 그들의 기준으로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구분으로 선발을 위한 변별을 해 왔다. 대학의 선발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때, 경쟁은 일어나고 이때 대학은 변별을 고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별은 수도권 소재지 대학에서나 고민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대학 졸업장의 유효성등으로 수도권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입학전형이 '선발'이라는 측면보다는 '충원'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즉, 경쟁이라는 전제가 매우 희미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교의 내신과 수능에서 성취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우려는 변별이란 대입을 위한 한줄 세우기가 곤란해 진다는 것이다. 즉, 내신성적이 한줄로 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뭉뚱 그려져 있다거나, 수능 성적으로 전국의 학생이 한줄 세우기가 아닌 너도 나도 성취도가 일정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등급 등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발제자도 언급했듯이 고작 10% 남짓한 학생들의 대입전형에서 변별이 고심인 것이다. 그 외 90%에 해당 하는 학생들의 대입전형에서는 그들의 역량 확인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10%의 변별을 위해 힘겹게 고교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앞으로의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파행으로 몰지 않았으면 한다.

대입이 갖는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대입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대입전형으로 활용되는 학생부의 항목도 축소되었고, 수능위주전형은 확대되었다. 다소 의심스러운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객관화된 수치로 한줄 세우는 것으로 대입전형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대입전형에서 공정성 확보의 기반은 '신뢰성'이다. 대입전형 자료와 운영 전반에 대해 신뢰해야 한다. 현재 대입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학생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을 관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대다수의 교사의 수업과 평가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은 모집요강과 모의논술이나 가이드북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전형의 방법 및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전형운영의 절차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고, 각종 설명회 및 박람회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알리미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전형유형별, 고교유형별, 지역별

전형결과 또한 공개하고 있다.

대입전형에서 공정성 확보의 기반이 '신뢰성'이라면, 공정성 확보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타당성'이다. 평가할 만한 것을 평가하는가의 질문이다. 대학입학전형이 공정하려면, 고교에서의 활동이 대입전형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한다. 고교 교육 과정과 활동으로 익힐 수 없는 역량이나 결과물을 대입전형 요소로 반영하도록 하면 안된다. 그러려면 고교교육과정 운영 여건과 활동 그리고 교사의 역량이 동일해야 한다. 만약 동일할 수 없다면, 동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교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것이다. 더 이상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전형별 비율의 균등 분할이나 객관성 확보 차원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입전형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할 때, 대입전형 또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대입 전형은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입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경험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 대학 입학전형을 설계 할 때,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학입학전형 준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경험이다. 학원에서 문제풀이 시험 준비를 하느라 힘들어 하는 것과 학교 내에서 자신을 탐색하고 진로를 설정하고, 교사와 친구들과 협력하느라 힘들어하는 것이 동질의 경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발제문에서도 제시되었던 현재 수시와 정시 분리 문제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과 N수생의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운영해야 한다.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전형 일정의 조율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내신의 5등급 상대평가 병기는 지속적으로 문제되기된 9등급 상대평가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2028 수능에서의 선택과목으로 인한 유불리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탐구의 경우 1학년에 진행하는 공통영역에서의 출제하는 상황 등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서 지향하고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우려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의 교육은 학생들이 대학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면 된다. 대학은 그 내용으로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입학전형을 설계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선발한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교 교육이 대학선발의 변별을 위해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도 선발을 위한 변별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학생의 역량을 꼼꼼하게 볼 것이다. 고교가 어떤 평가체계로 진행하든 대학은 그들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고교교육과 함께 가야하는 대입」 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고민

‘교육·훈련·강의’는 비슷한 맥락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인격 함양을 포함하는 ‘교육’은 훈련과 강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입 개편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대입 제도의 주체는 누구인가

-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추진 배경 및 방향에 따르면 ‘대입제도는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학생·학부모·고교·대학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 기술된 내용에 따르면 대입의 주체는 ‘학생·학부모·고교·대학’으로 판단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간의 경과 자료(붙임)을 통해 보면 과연 핵심 주체인 학생의 의견에 얼마만큼 귀기울였을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 교육의 운영 주체는 고교이며, 그러한 운영은 학생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은 교육의 결과물(교육을 통해 길러진 학생의 역량 등)을 활용하여 선발하는 역할을 이행할 뿐입니다.
-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면, 어디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하는지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대입만을 향해 쫓는 교육의 기형적인 생태계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에 집중된 수능은 과연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이번주말에 진행할 예정으로 아직 2024학년도 수시모집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전이기에 이번 입시를 진행하면서 소회를 드러내기는 시기상조이지만 평가하면서 안타깝게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전에 그러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고교의 교육을 위해 제가 속한 대학의 노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부종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학생부위주전형 가이드북’을 통해 교육과정, 실제 평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24학년도 대입을 대비한 가이드북에는 ‘대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좋은 교육과정’이라는 칼럼에서 ‘대학에서 바라보는 좋은 교육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고교 현장에 바라는 바, ‘성장을 위한 과목 선택 및 수업 참여’로 학생들에게 원하는 바를 제시하였습니다.

-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에서 바라보는 좋은 교육과정’

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② 화려한 포장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성장을 위한 과목 선택 및 수업 참여’ - 자기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후에는 충실하게 수업에 참여한다.

- 이러한 내용과 함께 향후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여 과목 선택 시 필요한 정보인 ‘전공 관련 교과 영역’ 뿐만 아니라 학과별 실제 (고교)과목 이수 사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렇게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가과정에서 느낀 안타까움은 공학계열로 진학하고자 하였지만 소속 고교에서 ‘기하’가 개설하지 않은 경우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학생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 개설을 학교에서 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 블라인드 평가이기에 어느 고교인지 확인할 순 없지만, 평가 과정에서 학교 규모가 작아서 개설할 수 없는 환경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연 이 학교는 왜 기하를 개설하지 않았을까?, 평가자 입장에서 고민해보았을 때, 그 이유는 현재의 수능체제가 ‘기하’라는 과목이 학생의 진로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과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편하는 수능체제는 향후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선택’과 ‘주도적 진로 설계’ 등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과 함께, 현재도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기하를 개설하지 않는..)를 해결할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미래사회가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하여도 대학의 입장에서 기초학업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예를 들어 공학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지만 수학과 과학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선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은 입학 후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학습할 준비(학업역량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학습태도 등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을 원하며, 적어도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은 그것을 학생부 중심(고교교육)의 전형으로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학 기본계획을 설계하면서 지역균형특별전형(학교장추천 인재 전형 등)을 학생부교과전형 방법으로 정부가 권고하였을 때 '과연 향후 고교학점제를 대비한다면, 학생부교과 100%(정량)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학생부교과전형이지만 과목 선택 및 수업 참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류평가를 포함하여 대학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대비하였습니다. 물론 서류 평가가 더 중요한 전형임에 따라 '학생부교과'답지 못한 전형이라는 쓴소리도 들어야 했지만 저희 대학이 그러한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라는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는 전형요소를 포함한 것은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개편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교육의 변화'는 체제 개편, 혁신적 변화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교육의 내실 있는 지원'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융합형으로 학습한 미래 인재를 내실 있게 선발' 할 수 있다는 기대?

- 대학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행 대입전형 구조의 변화없이 유지한다는 것은 제시하고 있는 수능체제 개편안
-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교육적 입장에서 다음의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1. 정량적 전형요소(수능, 학생부교과) 중심의 대입 정책 (수능 40% 이상 선발, 학생부교과 전형 일정비율 선발 등)

- 제시하고 있는 수능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대학의 고민은 과연 '변별'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변별'확보를 위해 정시모집에서 포함시킬 다양한 전형요소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학생부 중심의 서류평가, 면접평가, 제시문 기반 면접평가

「고교교육과 함께 가야하는 대입」 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고민

등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주도적인 과목 선택 및 이수를 요구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전형요소가 중심이 된다며 이러한 ‘선택’과 ‘태도’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2.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 고교학점제 뿐만 아니라 향후 나아갈 교육의 방향은 ‘경쟁’유도가 아닌 ‘성장’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평가 체계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한다하여도 다른 형태의 ‘경쟁’은 나타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성장’그리고 ‘역량’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대평가보다는 내실 있는 절대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대학의 선발 입장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상대평가가 수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는 현재 정량적인 전형요소를 강조함에 따라 나타나는 상황이며, 절대평가가 제대로 안착된다면 이를 활용한 대입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절대평가는 평가의 중심이 되는 교사의 역량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확보된다면 대입 개편안에서 기대하는 효과인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의미있는 고교생활’뿐만 아니라 점수 받기 위한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근본적으로 역량,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내실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 - 평가의 일체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 의견이 전국의 대학 입장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이라면 대학의 이기심만으로 공교육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고민은 적어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고민을 나누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담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기대한다.

2023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7년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고교학점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이 개진됐다. 다과목 지도를 위한 교사의 부담 증가, 학교·지역 간 교육격차, 학생 선택권 확대에 따른 보편적인 시민성교육의 약화, 공고한 대학 서열 체제하에서의 과목 선택의 왜곡 등과 같은 우려들이 제기되었으며 상당 부분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목전에 둔 현재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고교학점제를 ‘고교체제 개편 및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 보았던 교육부의 계획¹⁾에 적지 않은 이들이 공감하였으며,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발표되면서 제도로서의 고교학점제는 물론 고교학점제가 지향한 교육전환의 이상도 기약 없이 후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풍전등화(風前燈火), 고교학점제의 운명

박시영 교사의 발제문,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대입 개편안의 문제점’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와 그간의 노력 그리고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무력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단위 학교의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힘들긴 하지만 이를 통해 비인간적인 경쟁 중심 평가와 교육을 바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거란 기대를 갖고 있었다...하지만 이번에 교육부는 그 동안 발표해 왔던 모든 안을 백지화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았는지, 얼마나 숙고하고 오랫동안 논의한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는 발제자의 지적은 단지 한 교사의 허망함이 아니라 6년 동안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매진한 모든 이들의 허망함 일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협하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의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신 전과목 상대평가(성취평가 병기)와 고교학점제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으로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성’, ‘공동체 의식과 협력’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확대함으로써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교과 이수 기준(과목출석율 2/3, 학업성취율 40%)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책무성 또한 강조하였다. 이는 상대적 위치에 따른 경쟁적인 줄세우기 평가방식에서

1) 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2017.11.)

벗어나 오로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소신 있는 과목선택을 뒷받침하고,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교육적 피드백이 가능한 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생 과목선택과 성취 평가제’는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움직이는 핵심축이자 상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2028 대입개편 시안에서는 고교 전과목(예술체육, 교양 제외)에 대해 5등급 상대평가²⁾를 제시하였다(교육부는 절대평가 병기를 명시하였으나, 석차 5등급 상대평가와 병기된 절대평가의 무의미함은 현재 9등급과 성취도가 병기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을 통해 목격할 수 있다). 뗄 수 없는 것을 뗔 때의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첫째, 모집단 수가 많은 과목으로의 쓸림현상이 발생함으로써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진로선택, 융합선택과목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선택받지 못할 가혹한 운명에 처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평가활동은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가 아닌 5등급 서열을 매기기 위한 평가로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과목이수의 조건으로 제시된 과목성취율 40%의 의미는 왜곡되거나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는 미이수 예방지도와 보충지도 나아가 이수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하는 고교학점제의 마지막 의미까지도 무색해질 위험이 있다.

셋째, 선택과목 쓸림 현상으로 촉발될 학교교육과정의 단순화 또는 획일화는 ‘학교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고교 교육 과정의 다양화와 선택권 보장’을 명분으로 수직서열화된 고교체계가 더욱 확대되고 공고화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에 전과목 내신 5등급제와 성취평가 병기라는 이번 개편시안의 전면 절대평가, 성취평가제 적용으로 변경될 것을 제안한다. 최근 3년간(2019~2021) 성취평가 결과를 모니터링 한 연구결과³⁾에 따르면 성취평가제 초기에 지적된 그리고 개편시안에서 제기한 성적 부풀리기(grade inflation) 현상이 우려될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연구진의 진단과 같이 이는 ‘석차 9등급제와 병행하기 때문에 A수준을 과도하게 부풀릴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부분 있을 수 있고, 만약 전과목에서 성취평가제 결과만 표기될 경우 성적 부풀리기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성취평가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할 다양한 보완책⁴⁾을 통해 학생 성장을 위한 평가체제로, 고교학점제 및 교육과정 정상화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비교육적인 상대평가로 퇴보해야 함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2)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 적용되던 석차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전환한 것은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불안과 경쟁의 성격과 수준의 측면에서의 차이일뿐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어왔고 예정되었던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까지 5등급 상대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절대평가를 지향해왔던 그간의 교육정책에 반하는 명백한 교육적 퇴보라 할 수 있다.

3) 박혜영 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 개선 방안

4)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문항 DB구축, 고정분할점수 단일적용, 한국형 IB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수능 과목과 9등급제 유지 그리고 고교학점제

대입제도는 초·중등교육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가급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기존 수능 체제의 큰 골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육당국의 입장도 일면 이해가 된다. 다만, ‘가-승-전 대입’, ‘대입 블랙홀’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기존 대입체제 특히 수능체제의 미세조정은 고교 교육의 혁신과 전환을 발목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 두 분은 공통적으로 일반선택과목이 포함된 수능 과목은 고교학점제의 학생 과목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최재훈 교사는 수능과목은 공통과목만으로 자격고사화 하되, 시안의 과목 변경이 어렵다면 탐구영역만이라도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부분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공통 과목 중심의 수능 과목 편제는 그간 학계나 학교 현장에서도 지속해서 연구되고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서의 ‘선택’과목이 수능 출제 과목으로 포함되는 순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선택의 가치가 훼손되고,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능에서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다뤄야 하는가?’의 문제는 수능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사항으로 단순히 고교 학점제와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선택’의 가치가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없음 또한 사실이다. 다만, 수능에 종속된 현행 학교 교육의 현실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통과목 중심의 수능, 수능의 자격고사화’는 충분히 고려해볼 지향점임은 분명하다.

수능 과목 못지않게 고교학점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능의 요소는 수능의 평가 방식이다. 고교 내신이 5등급 상대 평가와 성취평가 병기 또는 전면 성취평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수능이 9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다면 대입전형 요소로서의 수능의 중요성은 강화되어, 수능 과목을 위주로 한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수능 평가 방식 또한 현재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절대평가를 다른 영역으로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재훈 교사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 점진적 절대평가 확대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제안이긴 하지만 자칫 상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으로의 풍선효과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래’를 담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기대한다.

고교학점제의 철학과 지향점을 다시 곱씹어야 할 때

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규칙이나 제도로써의 대입제도는 단순히 선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어떤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즉, 대입제도는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교육의 미래가 담겨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2013년 10월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는 어떤 미래가 담겨있는가? 시안에서 강조한 ‘통합적·융합적 미래인재’는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며, ‘공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말하는가? 시안의 미래인재와 공교육의 긍정적 변화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서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⁵⁾이나 2017 교육부(장관 김상곤)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과 다른가?

정치권력이 여러 번 바뀌고 교육부 담당자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우리 교육은 ‘줄세우기를 위한 상대평가에서 성장을 위한 절대평가로,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왔다. 앞으로 확정 될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또한 그 역사적 걸음에 동참할 수 있길, 최소한 걸림돌은 되지 않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5)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석차 9등급제는 교사가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등수에 의해 일률적으로 학생을 상대평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고교 석차 9등급제 평가를 성취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2011.12.13.)